



한덕수 총리, 시도·서울행정시스템 장애 관련 회의 개최

- 시도·서울행정시스템 장애 복구 진행상황 점검, 가용인력과 장비 총동원 지시
- 영상회의 주재 후, 곧바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 현장 방문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18일(토) 오전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이번 시도·서울행정시스템 장애 복구와 관련하여 관계자들과 영상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고기동 행안부 차관,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이보환 운영기획관, 이문주 전문위원(세림티에스지) 등

○ 이번 회의는 시도·서울행정시스템 장애라는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장애 복구를 위해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시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였다.

□ 이번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으로부터 복구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시도·서울행정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셨음에 송구한 마음을 표한 후, “현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련 민간 전문가와 함께 총력 복구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언급했다.

- 이어서, 한 총리는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에 어떤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하면서 관계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원인 규명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한 총리는 신속한 복구와 원인 파악과 함께 이번 전산망 장애에 따른 대국민서비스의 문제에 대해 추가로 조치할 사안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줄 것을 강조하였다.
 - 특히, 시도 및 시군구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수기 민원 접수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관련 공무원의 비상체제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시스템 소급 입력 방법 등을 통해 행정서류 미 발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국세청, 관세청 등 세금 납부 관련해서는 납부기한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도록 협조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주말동안 테스트를 완벽하게 해서 새행정시스템의 정상가동 시작시간을 단축토록 지시하였다.
- 한편, 한 총리는 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곧바로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복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정운영실 일반행정정책관실	책임자	과장 천영평 (044-200-2092)
		담당자	사무관 박도연 (044-200-2112)

